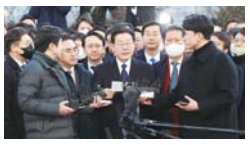
전주매일 CMYK

▶▶ 매일 INDEX



3면
"없는 죄 조작한 사법 쿠데타"

전주매일

2023년 1월 11일 수요일 (음 12월 20일) 제318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북특별자치도법, 국무회의 통과

다음 주 대통령 공포 예정, 전북 독자권역 인정 내년부터 시행… 도, 전담조직 신설 후속 절차 돌입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새로운 전북시대를 열어갈 전북특별자치도법안에 대한 안건을 의결함에 따라 이제 법 공포 단계만을 남겨놓게 됐다고 밝혔다.

다음 주 대통령이 특별법을 공포하면 전북에 특별한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특별법 제정절차는 모두 종료되며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전북도의 준비는 법 공포 전부터 신속하게 진행 중이다.

도는 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과 단위 전담조직을 3개 팀 14명 규모의 태스크포스(TF)형태로 운영하고 향후 국 단위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임시 조직으로 꾸려진 전북특별자치도 추진단은 전북도청 2층에 사무실을 신설하고 정책기획관을 겸임 단장으로 팀장급 3명이 배치돼 추진단의 역할을 분배하고 실행계획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이번 주 전북도 인사가 마무리돼 직원까지 모두 배치되면 △특별자치도 비전과 목표 수립, △종합계획 연구용역, △전북형 특례 발굴,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 운영, △중앙권한 이양 도·시군 기능 배분, △도민 홍보 및 인식 확산 교육 등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복지시설 봉사자들과 함께 김관영 도지사는 10일 설을 앞두고 노인복지시설인 신성양로원과 노숙인지원시설인 전주다시서기지원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종사원과 봉사자들의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사진은 전주다시서기지원센터를 찾은 김관영 도지사가 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타 시·도와의 협력과 특례 발굴을 위한 노력도 발 빠르다.

전북도는 타 시·도 벤치마킹 일정을 준비하는 한편 종합계획 수립과 특례발굴을 위한 회의를 운영하면서 기업유치와 교육자치, 농생명식품바이오, 문화산업 등 특례 발굴 대상 분야를 구체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북특별도법은 전북의 위상을 격상하고, 특례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재정자율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새만금 경제효과를 내륙에 확산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법 제정 절차도 4월과 8월 발의에 이어 12월 말 완료될 정도로 신속하게 추진된 만큼 향후 추진도 빠르게 진행될 기세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도전과 목표 달성 과정이며, 이를 활용해 새로운 전북시대를 열겠다"며, "전북의 매력적 투자여건 조성과 기업유치, 농업과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권한이양과 재정지원 등 자율성을 강화하는 특별지원을 관철해 전북 발전을 속도감 있게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가족·이웃과 사랑 나눠요"

김관영 도지사, 노인복지·노숙인지원시설 위문

"민족의 명절 설날을 맞아 가족·이웃들과 함께 사랑과 복을 나누세요"

김관영 도지사는 설을 앞두고 노인복지시설과 노숙인지원시설을 잇따라 찾아가 재원자들과 일일이 온정을 나누면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종사원과 봉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김 지사는 먼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보살피는 신성양로원을 방문해 "경기침체, 코로나19 등으로 봉사활동이 줄면서 이웃의 손길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외로움과 소외감이 깊어지고 있다"며,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 주고 친부모처럼 봉양하고 있어 감사하다"고 전한 뒤 시설 내 어르신들을 위문했다.

김 지사는 이어 노숙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전주다시서기 지원센터를 방문해 노숙인들이 삶의 역경을 이겨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시설 종사원들을 격려했다.

김 지사는 "동절기 한파 기간 중 시설 입소를 거부하는 거리 노숙인 밀집지역에 순찰 강화 등 노숙인 보호활동에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근무하고 계신 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힘들게 살아온 노숙인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있도록 종사자분들이 더 따뜻하게 돌봐 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위문품을 함께 전달하며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어머니의 마음처럼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명절을 보내기 바란다"며, "경기침체로 도민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지만 사회적 약자를 위한 나눔과 배려문화는 더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재훈기자

도, 대설대책비 긴급 지원

3월 15일까지 전액 집행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겨울철 대설에 대비해 행정안전부에서 확보한 대설대책비 31.84억원을 도내 전 시군에 긴급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21~24일 도내 전 지역에 최고 60㎝가 넘는 눈이 내려 비닐하우스, 축사 시설 등의 재산피해 발생에 따라 24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주시, 김제시 대설피해 현장 방문시 김관영 지사가 긴급 지원 요청한 특별교부세 31.84억원이다.

행정안전부에서 교부되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대설대책비 16.1억원, 제설제빙 취약도로 자동제설장비(열선, 염수분사장치) 15.74억원이다.

대설대책비는 시군별 수요조사 결과 및 지난해 12월 21~24일 대설·한파 피해 정도를 감안, 시군별로 배분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기록적인 폭설로 인한 도로 제설작업으로 많은 양의 제설제가 사용돼 비축률이 낮아짐에 따라 겨울철 대책기간(3월 15일까지)내 추가적인 강설 및 기온 하강에 따른 도로 결빙에 대비해 제설재를 추가로 구입, 비축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제설제빙 취약도로 자동제설장비는 제설작업 지연으로 도민 불편이 많은 제설 취약도로 및 상습 결빙구간(급커브, 고갯길 등)에 자동염수 분사장치와 도로 열선을 설치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인명 및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자동제설장비가 지원되는 지역은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진안군 5개 지역으로 관련 부서 및 해당 시군에 직접 교부될 예정이다.

도는 이번에 교부되는 특교세는 추경성립전 집행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겨울철 대책기간에 전액 집행해 도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시군과 함께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김재훈 기자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공적연금 대응 방안 논의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노동시장 변화 대응 등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이 서울 웨스틴조선에서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공적연금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10일 개최됐다.

포럼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후원하고 국민연금연구원(연구원장 권문일)이 주관했다.

이번 포럼에는 보건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국장과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을 비롯, 김원섭 교수(고려대), 김수완 교수(강남대), 강성호 박사(보험연구원) 등 연금 분야에서 오래 활동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으로 펼쳐졌다.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은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연금개혁의 주요 이슈에 대해 전문가 간 토론으로 국민연금제도 개선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 등의 주제로 개최된 바 있다.

포럼을 통해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등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공적연금의 대응에 대해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뤄졌다.

1세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의 발제를 맡은 연세대학교 최영준 교수는 공적연금이 중심축으로 설정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개혁 원칙 등 다양한 고려사항을 논의했다.

2세션 '노동시장의 변화와 공적연금 대응: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중심으로'의 발제를 맡은 문현경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노동시장의 변화와 공적연금의 현실 등을 설명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초점을 두며 이들의 국민연금 가입 실태를 분석했다. 문현경 부연구위원은 "향후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